

정부, 코로나 비상 대구에 '올인'...정 총리 상주하며 지휘

이날 오전 9시 기준 확진자 893명 중 500명 대구

고위당정청협의 "대구 중소기업 자영업자 특별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상 사태를 맞이한 대구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정세균 국무총리(중양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25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대구로 향해 상주하면서 현장 대응을 총괄하고, 예비비 지출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대구·경북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대구로 가 당분간 머물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 '심각'으로 격상

돼 정 총리가 방역체계의 최고책임자를 맡은 만큼 가장 위급한 현장인 대구에서 방역에 앞장서겠다는 뜻이다.

현재 대구는 도시 전체가 비상국면이다. 전날 오후 4시 기준 전체 확진자 893명 중 500명(56%)이 대구에서 발생해 지역 사회 감염 위험이 크다. 여기에 경북 231명까지 합치면 대구·경북 확진환자 수는 81.9%에 달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신천지 대구교회 등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집단감염 양상을 보이는 탓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단순 기침을 하거나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보이는 대구 시민 2만8000여명,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9000여명 등 총 3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2주 안에 진행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경찰도 전날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출입인 방역 조치 강화, 대면 업무 축소 등을 지시하면서 대구지역 경찰에 대해서는 비상 대비태세를 격상하라고 지시했다.

시민들이 외출을 삼가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이 폭 떨어지는 등 대구 지역경제도 신음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를 고려해 예비



비 지출 등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 편성 등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대구·경

북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을 특별지원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정에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임대료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 건물주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향후 대구에 머물며 현장 상황을 곧바로 보고받고 지휘하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 대책도 즉각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윤호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어쨌든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치료제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서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며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메커니즘을 풀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완성이 백신을 대량으로 안전하게 상품화하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장은 몸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이다. 중국 연구팀은 지난달 24일 국제 학술지인 NEJM에 코로나19로 진단된 환자에게서 바이러스를 추출하고 이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호주 연구진도 바이러스 분리·배양에 성공하고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예방의학과 전문의들은 "감염 확산을 막아 공포심을 덜어 주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게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비통한 김부겸 "배려없는 '봉쇄조치' 발언, 대구경북에 비수"

대구를 지역구로 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성갑)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나온 '대구·경북(TK) 봉쇄조치' 발언 파문과 관련, "대구경북 시민들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비수가 꽂혔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해받을 '봉쇄조치' 발언, 배려없는 언행, 일체 삼가해 주시길" 제목의 글을 올려 "발언의 취지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차

단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었지만 왜 이런 배려없는 언행이 계속되는지 비통한 심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아울러 당정청,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싸우고 있는 대구경북민들과 또 하나의 적, 불안감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대구경북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안겨 줄 수 있는 어떠한 언행도

일체 삼가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막고,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안정적인 방역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라며 "이례적으로 총리를 본부장으로 오늘부터 대구에서 상주하며 대응하기로 한 만큼, 코로나19 봉쇄를 위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

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고 말해 대구·경북 지역이 봉쇄조치가 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홍 수석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조기에 봉쇄하고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방역적 차원에서 봉쇄와 완화"라고 해명했다.

안철수 "마스크 수출 한시적 제한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출을 한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균 5000원짜리 마스크를 4인 가족이 1달을 쓰면 마스크값만 월 60만원이다. 아무리 비싸도 구할 수가 없으니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대표는 "어제(24일) 오후 대한의사회가 6번째 대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시행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다"며 "그중에는 정

부가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스크가 몇 시간 만에 45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랐다. 운 좋게 주문에 성공해도 배송에만 시나를 이상 걸리고 있다"며 "평균 5000원짜리 1회용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뉴스에 따르면 국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 1200만개라고 한다"며 "그중 지자체의 구입 물량과 중국 측 주문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황교안 "중국이 우리를 입국제한할 조짐...이래도 안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중

국발(發)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한 단계"라며 "가장 시급한 조치는 중국발 입국금지다. 외부에서 밀려들어오는 감염원을 차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국내에서만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즉각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실시하고, 새로운 유입을 막은 상태에서 국내 감염자 관리 및 방역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실시해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대체 왜 중국인 입국 금지가 안된다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전문가가 수도 없이 촉구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는 외출 자제를 삼가고, 각종 집회, 행사 등을 자제해달라고 한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인파는 막지 않고 있다"며 "이러니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마저 역으로 우리 국민 입국을 제한할 조짐을 보인다. 이래도 중국발 입국금지는 안되는 것인가"라며 "즉각 중국발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그것이 거의 유일한 극복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